

9 미·중 공급망 경쟁과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이재영 | 평화연구실 부연구위원

요약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공식 출범으로 미중 공급망 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는 IPEF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무역 규범 수립을 통해 국익 보호와 의제 선점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초기 개방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에 대한 시장부담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경제안보 외교와 경제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와 국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고,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기술 자립화와 대체 수입지 개발 혹은 전략물자 확보·비축을 위한 외교다. 특히 자립화에서 ‘한국형 반도체 전(前)공정 산학연 협력 모델’을 위한 외교가 시급하다. 둘째, 전략적 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와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다. 반도체 후(後)공정과 설계 등 우리의 취약 분야에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외교를 통해 혁신역량 강화와 인재 양성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에서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로 중개 외교, 연대 외교, 가치 외교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산업 분야, 모든 가치사슬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경제안보 외교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경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미·중 공급망 경쟁

2

2022년 5월 26일 미국의 조지워싱턴대에서 미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전략 관련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블링컨은 중국이 국제질서가 주는 안정성과 기회 덕분에 국제질서 재편 의지와 이를 위한 경제·외교·군사·기술적 힘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다. 중국은 법과 합의를 계승하기보다 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국제질서에 가장 심각한 도전인 중국의 공격적 행동을 막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중국의 궤도 변경에 대한 기대에만 의존하기보다 자유롭고 포용적인 국제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중국을 둘러싼 전략적 환경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대중국 전략의 키워드를 “투자, 공조, 경쟁”으로 제안했다. 이 중에서 한국과 관련 있는 전략은 미국의 경쟁력·혁신·민주주의에 대한 투자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 강화이다.

2022년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가입을 공식화했다. IPEF의 4대 주요 분야는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와 반부패이다.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14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협력체에서 한국에게만 선제 보복하기도 어렵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의 80%, 수입품의 64%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을 통제할 경우 한중 양국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한국의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 중국 의존도는 2020년 기준 33.4%로 G7 국가보다 높아 중국의 원자재 수출 금지는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우리는 IPEF에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무역 규범 수립을 통해 국익 보호와 의제 선점을 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만들어진 무역 규범과 기술 표준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미국 391건, 중국 126건, 한국 117건인데, IPEF나 중국과의 협력이 이러한 무역 기술장벽을 없애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IPEF 출범과 쿼드(Quad) 성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권위주의 가치 규범이 중심이 되는 공급망으로 양분되는 추세이다. 미중 전략적 기술 경쟁으로 인해 공급망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산업은 5G,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이다. 미국은 2021년 6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4대 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2년 2월 물류 운송, 음식·농산물, 반도체, 의료, 희토류, 배터리의 6개 산업의 공급망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도 2021년 3월 양회에서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자력갱생과 자립 의지를 피력했다. 2022년 5월 중국 공산당은 중앙과 지방 정부 및 국유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외국산 반도체에 의존하는 컴퓨터를 2024년까지 중국산으로 대체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2022년 5월 중국은 자국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자오신이 개발한 CPU를 탑재한 메인보드를 서방의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에 출시했다. 하지만 중국은 2021년 반도체 자급률이 15%도 안 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IPEF에 맞서 자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강화하고 IPEF가 다루지 않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대미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참여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브릭스(BRICS)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박차를 가하고 일대일로를 활용하여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장할 전망이다.

2021년 미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중, 미중 반도체 교역 규모는 170억 달러로 미국-아세안 교역 규모(30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한편 중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 중, 한중 반도체 교역 규모는 810억 달러로, 중국-대만 1천 2백억 달러, 중국-아세안 900억 달러에 이어 3위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경우 중국에 반도체 수출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뿐만 아니라 대만, 아세안, 일본, 미국 자신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초기 개방적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시장부담과 교역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균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 과제: 중견국의 경제책략과 복합외교

최근 한국에서 경제안보 개념이 부각된 계기는 2019년 한일 역사 갈등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조치, 2021년 한중 요소수 사태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6년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사드보복 조치도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요소수 사태를 제외하고 경제안보는 경제적 상호의존이 무기화되어 경쟁국이나 상대국에 압박을 행사하여 자국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제안보에서 핵심적인 요인은 이러한 경제적 강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주권과 공급망

의 안정성이다. 기술주권 확보와 공급망의 안정성 실현을 위해 ‘경제안보 외교’가 필요하고 그러한 외교의 수단으로써 정교한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을 설계해야 한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의 경제책략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와 국내에서 민간 기업의 활동과 시장의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고,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정부의 역할과 외교를 제안하겠다.

(1) 기술 자립화 혹은 대체 수입지 발굴과 전략물자 확보·비축을 위한 외교

첫째, 기술 자립화 혹은 대체 수입지 발굴과 전략물자 확보·비축을 위한 외교다.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재처럼 기술 자립도가 낮은 영역에서는 기술이전과 기술 협력을 통한 자립화가 필요하다. 우리 기업들의 자생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보조금과 기술 협력(이전)을 위한 외교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1나노 이하 용스트롬(0.1나노)급 초미세 공정의 첨단 반도체에서는 대만과의 협력,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일본과의 협력을 위한 외교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은 2019년 한국에 대한 반도체 무역 및 기술 제재로 오히려 자국 기업들이 수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피해를 보자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로 편입하여 생산기지나 R&D센터 등을 한국으로 이전했다. 이를 활용하여 우리 정부는 우수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의 더 많은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즉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리쇼어링(reshoring)과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정책을 우리도 모방하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선진 국가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산학연 협력과 인재 양성에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대학들과 산학 협력하여 차세대 반도체 표준인 양자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기술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공동 창출하는 자국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 기업 역시 국내외 대학과 산학 협력을 통해 이러한 기술 지식재산(IP)을 공동 창출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미국(설계, 인텔·엔비디아·퀄컴)과 대만(생산, TSMC)에 뒤처져 있다. 메모리 분야에서도 중국, 유럽과 일본의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삼성의 GAA(Gate-All-Around) 기반 2나노 공정 생산 등을 통해 초격차 전략을 유지하고, 선진국보다 열세인 전(前)공정 장비 개발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IPEF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설계(미국)-메

모리 반도체 설계 및 생산(한국)-소재·부품·제조장비(일본)-후(後)공정(말레이시아) 등 반도체 다자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소재 기업 가운데 EUV(극자외선)용 마스크 제작에서 세계 최강 업체인 일본의 호야와 신에츠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에스앤에스텍이 일본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마스크 라이터의 일본 뉴플레어와 오스트리아의 IMS와의 협력과 투자 유치를 통해 이 분야에서도 자립화를 추진해야 한다.

반도체 7나노 이하 미세 전공정에 필수인 EUV 노광장비는 ‘슈퍼엘(乙)’인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 생산한다. 올해 예상 장비 출하량은 51대로, TSMC와 삼성전자가 각각 18대와 22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인텔은 ASML의 차세대 EUV 노광장비인 ‘개량된 개구수(High Numerical Aperture: High NA) EUV’ 도입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삼성도 미국 및 대만과의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ASML의 차세대 장비 도입이 시급하다.

한편 ASML코리아는 한국 동탄에 2025년까지 2천 400억 원을 투자해 DUV(심자외선)·EUV 트레이닝 센터, 재제조 시설 등이 들어갈 반도체 단지를 건설하고 한국 반도체 업계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도울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다른 지자체와 지방 대학도 ASML과 동탄의 협력 사례를 모방하여 ‘한국형 반도체 전공정 산학연 협력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ASML의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협력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ASML과 네덜란드 정부와의 외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반면 요소수와 희토류 같은 범용재의 경우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인도를 희토류 대체 수입지로 삼는 등 수입 다변화가 꼭 필요하다. 모든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이나 수입 다변화를 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산업과 품목에 따라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전기차 배터리용 흑연, 리튬, 니켈을 포함한 228개 핵심 수입품 가운데 8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한국무역협회, 재외공관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기관들을 통해 전략물자 확보와 비축을 위한 외교를 추진하여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특히 RCEP이나 CPTPP 등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체공급원을 확보할 때까지 리튬 등 배터리 핵심 원료와 중국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반도체 소재인 산화텅스텐 등의 확보에 있어 중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전략물자 확보와 비축을 위해 중국 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결성해 제3국에 진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LG는 중국 기업 화유와 CATL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배터리 생산 일괄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LG 화학은 중국 최대 코발트 생산업체 화유코발트와 국내 경북 구미에 연 6만 톤을 생산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포스코케미칼도 중국에서 양극재(절강화포), 전구체(절강화포)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 전략적 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와 인재 양성 정책

둘째, 전략적 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와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고부가가치재 영역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적으로는 해외투자 유치와 산학연을 통한 전략 산업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 인재 양성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내와 해외 생산기지를 다변화하여 특정 생산거점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반도체 수요가 높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반도체 R&D센터나 제조기지로 삼고, 반도체 소재 및 생산의 대안 공급기지로 부상하는 인도와 호주로도 생산기지를 다변화해야 한다. 전략적 산업에서 혁신역량 강화와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M&A)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반도체 전(前)공정 못지않게 후(後)공정도 중요하다. 파운드리(foundry)에서 생산한 시스템 반도체의 최종제품화가 이 후공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 차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파운드리에서 더 많은 시스템 반도체 생산이 필요하고 이러한 파운드리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속에서 더 많은 후공정 업체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과 테스트 전문업체(OSAT)의 시장 규모는 2019년 575억 달러(약 71조 원)에서 2026년 823억 달러(약 101조 7,000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기업은 주로 대만과 중국 기업에 패키지 및 테스트를 의뢰하는데 시장 선점 기회 상실 혹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패키지 기술 기반 강화와 3D 패키징 같은 적층 기술 개발,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 대만, 네덜란드 등 선두 국가의 기업들과 기술이전과 협력 혹은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외교가 절실하다. 국내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네패스, 그리고 두산이 인수한 테스나와 같은 기업들과 해외 후공정 업체들이 우리의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과 산학연 협력 및 반도체 후공정 실무자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방위적인 투자와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인수합병에 있어서는 시스템 반도체의 다품종소량생산 체제에 필수적인 팹리스 기업과 관련 인재가 한국엔 아직 충분히 육성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외국 팹리스 기업과의 인수합

병을 추진하고 정부가 공공 팹(fabrication facility: FAB)을 만들어 해외 기업과의 협력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인도의 AI 칩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들이 한국의 팹리스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인텔과 영국의 ARM 같은 전통적인 글로벌 최강 반도체회사와 네덜란드의 NXP와 독일의 인피니언 등 차량용 반도체 최강 업체와 팹리스나 지식재산(IP) 관련 R&D센터 또는 산학협력 등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지렛대로 삼는 외교가 필요하다.

(3) 산업·국가·진영별로 차별화된 복합외교: 중개 외교, 연대 외교, 가치 외교

셋째, 한국의 경제안보는 외교와 동맹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경제안보 외교는 산업·국가·진영별로 중개 외교, 연대 외교, 가치 외교 등 복합외교가 필요하다. 즉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개 외교,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환경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해관계가 유사한 ‘국가’와는 연대 외교,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진영에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진영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외교를 모두 구사하는 복합외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첨단 산업 기술의 글로벌 표준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중 사이에서 산업별 중개 외교는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추진할 수 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수출 1위는 독일(수출액 약 155억 달러), 2위 벨기에(98억 달러), 3위 중국(81억 달러), 4위 한국(56억 달러), 5위 미국(46억 달러)이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중국 점유율이 2021년 48.7%로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 한국 배터리 3사는 30.4%로 중국을 추격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소재와 정제 시장에서 중국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 업체와 협력하면서도 배터리 원자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미국과는 배터리 공급망 재구축 협력을 강화하는 중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즉 미국과의 배터리 공급망 재구축 협력에서 중국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최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기술 수준이 유사한 미국, 일본, EU와 연대 외교를 통해 첨단기술 수출통제 제도와 규제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리고 환경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위한 연대 외교도 중요하다. 2021년 국내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생산의

7.5%인 4만 3천 기가와트시(GWh)에 불과하지만, 삼성전자 한 기업이 전 세계 사업장에서 소모하는 전력은 2만 3천 기가와트시(GWh)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절반을 좀 넘는다.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에 RE100을 적용해야 한다는 글로벌 투자사와 주요 기업들의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 구매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해외 신재생에너지 업체와의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미국, 일본, EU 등과 연대 외교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규범 형성을 위해 이해관계와 국력이 유사한 아세안, 인도,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중견국들과 연대 외교를 통해 미중 전략적 경쟁의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사이에서 가치 외교를 전개할 때 미국과는 민주주의와 자유 및 인권을 매개로 하고 중국과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매개로 하는 경제안보 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번영은 호환 가능한 가치이자 이념이다. 이처럼 한국이 중시하는 가치가 여러 가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치의 충돌과 갈등이 아니라 호환과 협력에 방점을 둔 차별화된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구르 강제노역금지법(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신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패널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수입 금지를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의 45%가 신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업체인 OCI에 큰 기회가 올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한국을 태양광 파트너로 선택했고 한화솔루션과 OCI 등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은 가치동맹이 우리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경제안보 외교의 유연한 적용을 통한 평화경제 창출

2022년 5월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 부결된 적은 처음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추가 제재가 비효율적이고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의 원인은 북한의 긍정적이고 선제적인 조치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북핵문제에서 드러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정치안보, 군사외교, 신흥안보

와 경제안보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은 러시아의 원유와 가스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러시아는 에너지 판매 대금을 통해 여전히 국가 경제를 지탱하며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쿼드 가입국 중 하나인 인도 역시 서방의 대러제재에 가담하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지속해서 원유를 할값에 매입하고 있다. 그리고 북중 간 보건 방역 협력은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백신지원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 경제와 안보의 밀접한 연계에서 출발하면 한반도 평화·번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북관계와 한중관계의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즉 기존의 정경분리 원칙 속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평화경제와 기능주의 효과를 추구했던 외교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와 무역의 교류 협력 확대를 통해 정치와 군사 분야에까지 낙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근래에 작동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기능주의와 평화경제의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중국-대만의 양안 관계가 대표적인 예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와 모든 산업 분야 혹은 모든 가치사슬에서 경제와 안보를 연계시키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동맹국 혹은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와는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해야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는 특정 산업과 가치사슬에서 정경분리, 평화경제, 기능주의 등에 입각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즉 경제안보 외교의 유연한 적용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경제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과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광물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배터리 핵심 소재인 흑연 매장량 2백만 톤의 세계 10위, 희토류 4천 8백만 톤의 세계 2위 등 잠재 가치가 크다. 과거 일부 성과를 거뒀던 2003년 정춘 흑연광산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예이다.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과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가치를 매개로 중국 동북3성과 북중 접경 지역에서 남북중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와 같이 우리의 주력 경쟁 산업에서는 경제안보 외교를 통해 미국과 연대함으로써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필요도 있다. 즉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 전략은 모든 산업과 업스트림(Upstream), 미드스트림(Midstream), 다운스트림(Downstream)의 모든 가치사슬 체계에 대한 비판과 재편이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 등 특정 산업과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일부 가치사슬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다른 산업과 다운스트림에서는 중국에 대해 정경분리와 기능주의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두 접근법이 충돌할 경우 우리의 국익과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겠지만, 호환과 병립이 가능한 영역에까지 선택을 자처할 필요는 없다. © KINU 2022